

강기정 시장, 내년 지방선거서 분권형 개헌투표 제안

지방자치 30주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서 주장 산업·에너지 분권 자립형 지방정부 모델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처럼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광주는 산업·사람·복지·경제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좋은 정책을 발굴했고, 이러한 지방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에서 산단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드는 등 애를 써도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며 “그 이유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 대통령과 국회 중심의 제도와 인식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는 끊임없이 좋은 청년정책을 펼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 이를 위해 산업과 에너지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방향성을 명시하고, 재정과 입법, 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타협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위해서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인재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오전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에너지분권·균형발전 등 자립형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양성이 핵심”이라며 “지방태를 살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향후 30년 지방자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방향

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KBS와 M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YTN과 CBS 유튜브

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됐다. SBS와 MBN에서는 녹화방송으로 송출된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올해 경기 악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 골목형 상점이 지정, 매출·상권에 긍정적…“확대해야”

광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감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관리체계 구축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시 소상공인 활성화 위한 지원정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소상공인의 82.8%가 ‘올해 지역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으

며, 자신의 사업장 상황에 대해서도 73.6%가 ‘위축 또는 둔화했다’고 응답했다. 체감 경기점수는 지역 평균 14.51점, 사업장 평균 21.26점으로 나타났다.

또 골목형 상점이 지정에 대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8.6%, 정책 만족도는 69.9%, 상권 활성화 기여도는 71.6%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골목형 상점이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 증가폭은 ‘10% 이하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는 응답이 55.4%로

과반을 차지해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80.5%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75.1%는 ‘현장형 골목상권 지원센터 도입’을 요구해 기존의 단순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상권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 및 컨설팅·디지털화 등 실무 지원(48.3%), 상권 브랜딩 및 공동마케팅 지원(25.3%) 등이 꼽혔다.

또 응답자의 89.8%가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공용주차장 확충과 접근성 개선(50.6%)’이 제시됐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유례없는 경기침체 위기에 기존의 단순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각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체험형 전략과 관리 조직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지역 소상공인 5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행복+…사랑의 온도탑 올려주세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12월부터 62일간 대장정 광주 51억2000만원·전남 113억9000만원 목표

광주·전남 소외이웃에 온정을 전하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날 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전남 서부권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같은 날 오전 11시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도의회 의장, 김대중 도교육감, 모상묘 전남경찰청장, 허영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100여명이 자리한다.

전남 동부권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2일 오후 2시 여수시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첫 기부금 전달식과 아너 단체 가입식,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올리기 퍼포먼스 등이 이뤄진다.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다. 목표액이 달성될 경우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가리킨다.

올해 광주의 기부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1억2000만원이다.

전남의 목표 모금액도 113억9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은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돕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모아주신 성금은 광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1면 ‘GPU 확보하라’서 계속

지역 IT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의 승패는 데이터보다 GPU에 달려 있다”며 “광주가 국가사업의 수혜를 기다리기보다 정부와 민간의 GPU 공급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도 GPU를 분산 제공해, 전국 단위의 AI 학습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기반의 클라우드 센터를 중심으로 AI 기업 지원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AI사관학교 등이 GPU 기반 연구 인프라를 확보한다면, 지역 청년과 스타트업이 초거대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년 연장·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전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위원회에서 확정된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년 연장돼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올해까지 제한돼 산업위기로 세수가 급감한 산업위기 지역은 재정 보강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 재정 보강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준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계속해서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지난 9월 신청한 광양시가 지정될 경우 전남 지역에 2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흥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교부세 추가 확보는 산업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여수시·광양시의 안정적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국토부 “일정조정 사유”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위원회(이하 여객기참사 피해지원·추모위)’ 출범식이 오는 12일 오후 3시로 이뤄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초 4일 예정이었던 여객기참사 피해지원·추모위 출범식이 미뤄진 데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참석자들의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추모위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2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피해지원·추모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 총리와 유은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

모두 10명이다.

위촉직 위원은 김유진 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는 법률, 의료·심리, 재난안전·관리, 인권, 추모시설, 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명이다. 피해지원·추모위는 △피해자 확인과 생활지원·심리상담·치유휴식·교육 등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 △재난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피해지원·추모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

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조만간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아직도 12월 29일에 살고 있다는 유가족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